



## 2008 제조업체 생존을 위한 워크숍

제조업체들의 복장 터지는 애로점 속속 분출

김영도 기자 inheart@korea.com

## 2008 제조업체 생존을 위한 워크숍

- 제조업체들의 복장 터지는 애로점 속속 분출
- 주무기관의 미온적 태도 소방산업 하향가속
- 소방방재청과 소방검정공사는 연중 검토 중

---

### 소방산업육성발전 정책의 단절과 소통

---

지난 21일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은 제조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소방산업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거듭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의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번 워크숍은 제조사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조합 출범이래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제조업체들이 위기의식을 심각히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각사의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하향산업으로 추락하고 있는 소방산업을 자정하고 개선시켜야 한다는 소방종사자들의 금지가 함축되어 있다.

특히 정형로 이사장이 취임한 이래 제조업체들이 처한 상황들을 난상토론이라는 형식으로 매우 민감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은 그동안 소방산업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정부나 관련기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현 상황을 업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완화 조치라는 미명하에 일반 시장경제 논리를 안전산업 분야에도 적용하였고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부서 없이 방치해오며 책상머리 행정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소방산업의 하향화를 가속시켜왔고 소통의 단절마저 가져왔다.

그 결과 소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시장경제 논리에 떠밀린 채 저가덤핑이 날은 품질이하의 제품 양산체제로 시장이 형성되었고 '검정 받는 제품 따로, 파는 제품 따로'라는 불신감마저 심어주



▲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사진: 최영 기자

는 등 탄실하게 성장해 온 제조업체들만 피해를 입는 형국이 됐다.

## 소방산업발전의 저해요인과 대처방안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방산업 발전저해 요소로 13개 항목을 열거하여 공론화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조합이 공론화한 문제점은 ▲제품생산 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 결여 ▲원가절감으로 인한 품질저하 ▲제품검사의 취약점(샘플확인)을 악용한 불량부품 사용 ▲생산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저가덤핑 ▲검정수수료 부담 ▲상시검정으로 인한 제조업체와 검정공사의 부담 ▲형식기준 및 검정기준의 번문옥례(繁文縟禮)화 ▲저가위주의 시장 ▲형식승인 승계 ▲불법제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 소재 ▲사후관리의 전반적인 부재 ▲우수제품개발 동기부여 부재 ▲내수제품의 역차별 등으로 소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삼았다.



▲ 정형로 이사장은 행사출신답게 소방산업의 특성과 시장구조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도표를 그려가며 소방제조산업을 조명하고 진단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으로 조합은 현행의 사전 제품검사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공장의 품질관리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제조자의 선택에 따라 사전제품검사 또는 품질관리 심사 제도를 채택하는 방안, 품목별로 사전 제품검사 혹은 품질관리 심사 제도에 강제성을 두는 방안 등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 사전심사제도 vs 사후관리제도

업체들은 검정업무 개선에 있어 입장을 각각 달리했지만 현재의 형식승인과 개별검정의 기준강화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 신우전자 이기원 대표이사

신우전자 이기원 대표이사는 형식승인과 개별검정에 대해서 차별성을 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기원 대표이사는 “현행 형식승인과 개별검정을 한 기관에서 시행하다보니 제품의 하자가 발생되면 검정공사와 소방방재청이 연결되어 무마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 소방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전하면서 “형식승인과 개별검정의 주체가 분리되어 형식은 현재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엄격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별검정의 주체를 조합에 위임해 분기별로 제품을 수거하여 형식과 동일하게 생산하고 있는지를 검사해서 불법, 편법 사안은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법적인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별검정에 있어 사전관리는 제조설비가 없고 일부 시험설비를 갖춘 회사를 대상으로 검정비용을 높여야 하고, 사후관리는 제조설비와 시험설비를 규정대로 갖춘 회사를 대상으로 형식승인비용과 개별검정비용을 낮추는 차별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대명기계공업 김재호 대표이사

대명기계공업 김재호 대표이사는 “개별검정을 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으로 제조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검정공사의 형식승인으로 개별검정을 함부로 손을 댄다면 우리 제조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개별검정제도를 허술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형식은 강화시키고 개별검정은 완화시켜 개별검정 수수료를 인하하면 제품가격도 인하되어 시장에 나가기 때문에 악순환만 반복되기 때문에 형식승인과 개별검정의 기준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조업체들은 현 검정수수료에서 20%~40% 인하를 기대하면서 사후품질관리에 있어 업체가 자신이 없을 때는 일반심사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품질관리에 자신이 있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실시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 엄격한 공장심사제도 도입해야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업체들은 정직하게 생산하면 부도로 이어진다는 것이 소방용품 제조업계의 정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생산·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해 100억을 투자한 기업과 1억을 투자한 기업의 평가가치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통탄했다.

간단한 시험설비만을 구비해놓거나 렌트해서 설치해놓고 직접 생산이 아닌 oem 방식의 생산으로 품질이하의 제품을 생산해도 제품이 검정기준에만 통과하면 저가위주의 덤핑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설비로 우수품질의 제품을 양산해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방용품 제조업을 10여년 이상해온 업체들로 사업초기에 설비한 생산투자비용이 회수되지 못한 채 마이너스로 작용하면서 신생 경쟁업체들의 저가덤핑으로 상당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해하이테크산업 이호선 대표이사

지난 1974년부터 소방호스만을 전문으로 생산해 온 동해하이테크산업 이호선 대표이사는 “검정 공사는 우리의 제품을 검정해주기 때문에 검정을 받은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맹점을 가지고 있고 검정기준에만 합격하면 누구나 생산할 수 있다”고 품질저하를 유도하는 검정기준의 평준화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또 “소방제품을 일반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기 보다는 주로 건설회사들이 저가위주의 제품들을 선호하여 구매하는 형태로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호선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문제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공장심사제도를 통해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선진외국처럼 조합의 각 분과위를 통해 공장심사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우전자 이기원 대표이사는 “한국 가스안전공사도 엄격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에 설립된 공장까지 직접 방문해 생산에 필요한 제반적 시설들을 꼼꼼하게 실사하며 공장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기술투자하면 망한다

---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이 지난해 본지와 인터뷰를 가지면서 여담으로 국내 소방기구 제조업체들의 기술력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때 정형로 이사장은 “시장이 없어 만들지 않을 뿐 시장만 있다면 세계 시장에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소방기구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 씨엔이지에스 유덕명 전무이사

그리고 일 년이 지난 지금 씨엔이지에스 유덕명 전무이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가며 국내 최초로 선진국형 아날로그 감지기를 개발해 형식승인을 받았지만 화재안전기준에 아날로그 감지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따르지 않고 있어 판로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한다.

유덕명 전무이사는 “최근 업체난립으로 인한 저가덤핑 등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연구 개발을 하지 않아야 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 용원이엔씨 김형수 대표이사

기술도 향상되고 제품의 품질도 높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는 제도에 막혀 손해를 입게 되어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가 소방업에 종사한지 30년이 되었지만 처음 소방업에 들어왔을 때의 감지기와 지금 생산되고 있는 감지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선진 최신기술을 도입해 국내 토양에 적합하게 개발해 놓아도 이를 검토하고 수용해야 하는 제도 입안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부재한 탓에 애써 제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시장진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마련이어서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형식을 받아 판매하는 형태가 늘면서 국내 소방기구 제조기술의 사장을 부추기고 있다.

용원이엔씨 김형수 대표이사는 “신축배관을 ni로 부터 인증을 받을 때 카다로그에 있는 품목들을 모두 요구해서 신축배관이기 때문에 각각의 길이가 약간의 오차가 있어 전 품목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담당매니저에게 설명해주자 시험대상 규격 내에서 간소하게 인증을 받은 반면 우리는 불필요하게 각각의 규격에 대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같이 ni 형식인증을 받아 왔을 때 검정공사에서 ni인증에 대한 검정을 인정해줄 것인지 궁금하다”고 전하면서 현행 기준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 msl(구 명수리) 성세제 대표이사

한 평생 국산 에어컴프레서 개발해 생산해온 msl(구 명수리) 성세제 대표이사는 “세계 표준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소방제품을 국제시장에서 인정받게 할려면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제조업체들의 실상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검사기관들이 기술개발에 따른 애로사항들을 현장에 나와 청취하려들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책상머리 행정에 대해 질책했다.

---

## 제값주고 제값 받기

---

소방특장차 업체들은 소방자동차를 각 시도별로 납품하면서 겪는 고충들을 토로했다.



▲ 우리특장 이순주 대표이사

우리특장 이순주 대표이사는 “소방펌프차가 작년에는 1억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억5천만원으로 됐으니 2천만원 증액되었다 싶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1억 5천만원 소방자동차를 사면서 1억 7천만원 상당의 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방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기가 예산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소방자동차에 끼워 예산을 반영하는 폐단이 있어 구매계약 후 요구하는 규격서를 보면 부수장비가 증가해 있지만 제조업체들은 다음 구매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맞춰주는 형편이다.

국내 소방자동차의 근간이 되었던 남영자동차와 몇몇 관련업체들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폐단이 작용해 결국 업체를 도산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순주 사장은 “시장에 비해 손가락 든 사람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 관련업체들의 책임도 있겠

지만 앞서 지적한 불합리한 구매시스템을 개선해 특장업체의 발전과 좋은 품질의 소방차를 만드는데 투자할 수 있게끔 장비와 차를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소방방재청은 연중검토 중

---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소방방재청 과학기반과 김일수 계장은 “제조사들이 난상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하면서 “소방제조업에 대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한다면 어느 누구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과학기반과로 온 이후 소방제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추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일수 계장은 워크샵에서 제조사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열거하며 소방방재청의 입장을 전달해 나갔다.

먼저 신제품과 신기술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제조사들의 지적에 대해서 김일수 계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신제품을 검토하려면 제도과에서 소방시설유지법 화재안전기준 개정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여기에는 반대논리들이 작용하면서 결국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만다”고 말했다.

제도 하나를 개선하려고 해도 이권을 앞세운 관련인들의 목소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작용하면서 관련부서들이 공명정대하게 이를 수용하고 여과하기에는 민원제기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검정기준의 강화에 대해서 김일수 계장은 “국제화 기준에 맞춰 우선적으로 34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나갔을 때 자국제품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세 번째로 부도업체 형식승인의 승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형식승인을 내주면서 부관조건에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기술운용의 문제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네 번째로 검정제도에 있어 역차별적인 수입제품의 면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적극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국가경쟁력과 기술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 형식승인과 개별검정의 분리에 대해서는 “신정부 출범당시 인수위에서 검정제도의 독점을 폐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검정제도의 이원화, 삼원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형식승인과 개별검정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섯 번째로 공장심사제도에 대해서 김일수 계장은 “공장심사제도는 분명히 부활해야하며 청운소방 불량소화기 파문도 공장심사제도의 부재로 비롯되었다”고 품질관리를 통한 우수제품 양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곱 번째로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검토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내구연한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로 규정해 소방시설 담당자가 제품의 내구연

▲ 소방방재청 과학기반과 김일수 계장

한에 따른 제품의 교체주기를 파악하여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김일수 계장은 제조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방방재청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은 각 분과위를 개최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업체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조직적이고 활성화된 분과위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m119.co.kr

기사입력시간 : 2008년 05월26일 [13:39:00]